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22

2023.10.1.~2023.10.31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(10.16)

-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 공유와 중견기업 현장의견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
- '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', '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', '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', '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 개선', '폐기물 재활용업 인·허가 규정 개선' 등 건의

□ 제3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(10.17)

- 중견련은 주요 중견기업 정책 및 지원사업을 안내하고,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·투자를 저해하는 '킬러규제' 발굴·해소를 위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대구·경북권 소재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
-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기업 대상 무역금융 등 대출 지원 확대, 유통·물류 등 서비스업 중견기업 대상 지원책 강화, 공산품 중심 수출 지원 정책의 대상 확대 등 수출·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, 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촉구

□ 상시법 전환된 '중견기업법' 본격 시행 (10.19)

- 상시법으로 전환된 '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이 10월 19일 본격 시행
-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모든 규모 및 업종의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 모색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중소벤처기업부]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(10.4)

-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상생협력법)' 시행으로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되며, 위반 시 최대 5,000만원의 과태료, 최고 5.1점 벌점 부과
-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, FAQ를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에서 배포해 기업들의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

□ [환경부]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헬프데스크 개소 (10.5)

-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'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(EU CBAM 헬프데스크)'를 10월 5일 개소하고 1대1 맞춤형 상담 상시 제공

□ [기획재정부] 기업현장규제 개선 방안 (10.5)

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, 모빌리티산업, 환경·화학물질 분야의 기업 현장 규제·애로 개선을 위해 ▲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합리화, ▲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, ▲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등 추진

□ [한국수출입은행] 중견기업 대출금리 인하 (10.11)

- 중견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해 8월 신설한 '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'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최대 0.8%p 금리 우대 혜택 적용

□ [기획재정부]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(10.12)

-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10개 부처의 22개 법률,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
□ [기획재정부]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(10.16)

-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▲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, ▲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, ▲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등을 중점 추진

□ [금융위원회]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(10.16)

-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26년 이후로 연기하고, 자율공시 확산 및 기업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선정 (10.17)

- '라이징 리더스 300' 2기 기업 34개사를 선정하고, 중견기업의 ▲수출 확대, ▲신기술 개발, ▲ESG 대응, ▲디지털 전환 등에 우대금융(기업별 최대 300억 원, 1.0%p의 금리 우대) 4,400억 원 및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 제공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美 상무부, 대중(對中)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(10.18)

- 미국 상무부는 첨단 인공지능(AI) 칩 통제 강화 및 반도체 장비 통제 범위 확대를 위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 (10.19)

-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, ▲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 표준화 추진, ▲무탄소에너지(CFE) 프로그램 개발, ▲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, ▲국제 공동연구 및 개도국 지원 협력 강화 등 추진

*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: 원전,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(CFE)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글로벌 운동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(10.19)

- ①압도적 제조역량 확보, ②기술·인재 강국 도약, ③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등 3대 기본전략에 따라 ▲국내 첨단산업 투자 촉진, ▲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·인재 혁신 생태계 조성, ▲안정적 소부장 밸류체인 구축 등 추진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(10.27)

-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'기회발전특구'를 지정하고, ①규제특례, ②세제·재정지원, ③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

입법동향

1 정부

□ [고용노동부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(10.4)

-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,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▲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(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확대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), ▲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(분할사용 횟수 확대, 급여 지원기간 확대), ▲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(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) 추진

□ [금융위원회]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(10.12)

-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대상기업 확대(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)에 따라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교육 진행을 위해 개정안 발표

□ [보건복지부]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(10.17)

-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기술,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·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'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'를 설치하고,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, 제품화, 보험등재, 시장 진출 등 전주기 지원 정책 마련

□ [환경부]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(10.31)

- 유해성, 경제성,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해 7개 품목(폐지, 고철, 폐금속캔, 알루미늄, 구리, 전기차 폐배터리, 폐유리)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, 순환이용 용도,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 구체화

2 국회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, 10.4)

- 혁신도시·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 한도를 정해 5년(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분의 100, 다음 2년 간 100분의 50) 간 법인세 감면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, 10.10)

-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'22년 6월 30일에서 '23년 6월 30일로,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'23년 12월 31일에서 '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

□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, 10.10)

-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,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및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

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, 10.10)

-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제도 대상에 포함